

민주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결국 특검만이 정답”

“김 여사 입장 밝히고 수사 자청” 의혹 사실이면 총선 공천 진두지휘 “윤·한, 한가하게 독대 신경전” 비판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 국민 한숨만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의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국 특검만이 정답”이라며 “논란의 중심에선 김 여사가 국민 앞에 서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자청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켜주고 있던 권력의 성벽이

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일부 공천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지난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한 셈”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여당의 총선 공천을 진두지휘했다면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앞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제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등장했다”며 “최소실 국정농단의 양과 질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용인갑에 출마하려던 김 모 전 행정관은 출마가 무산됐고 그 이후 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며 “사안이 이 정도라면 경찰은 지금 당장 김 여사와 그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이철규 의원 등에 대해 휴대전화부터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결책은 명약관화하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또 다시 거부권이라는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거란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의소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된 A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원모 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총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해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만찬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 신경전’을 두고 “터널의 끝조차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의료대란에 ‘지지율 바닥’ 정권 책임자들이 한가하게 신경전이나 벌일 때냐”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

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나열하며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한 독대’를 둘러싸고 자존심 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 이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현실인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언론에 독대를 흘리는 한 대표나, 독대 수용을 마치 권위의 훼손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이나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오늘 만찬마저 배만 채우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으로 끝낼 생각이라면 때려치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한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부가 설 자리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세 정의냐 증시 부양이냐” 민주, 금투세 찬반 격론

시행팀 “시장 투명화 등 필요” 유예팀 “자본시장 위축 우려” 진성준 “의총 통해 당론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시행과 유예를 두고 열띤 격론을 벌였다.

‘시행하자’는 측에선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시행을 유예하자’는 측에선 “국내 증시 부양부터 해야 한다”며 ‘선 부양론’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열었다.

시행팀에선 김영환, 김성한, 이강일의원이, 유예팀에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 주자로 나와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계”라며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예팀은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지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

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되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제도 도입 시 고액 투자자의 주식시장 이탈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 등 국내 증시 선진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유예론을 펼치고 있어 유예 쪽으로 당심이 기울어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시행과 유예를 놓고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정책 디베이트(토론)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 총의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마친 정책 디베이트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곡성에서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와 백세미 수확 시연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에서 장현(오른쪽) 영광군수 후보, 박응두 곡성군수 후보와 함께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혁신, 영광·곡성 재선거 앞두고 신경전 가열

혁신당 사무총장 “호남의 국힘” 민주 “모욕적 표현… 해임하라”

오는 10월16일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호남 주도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가 호남에선 민주당이 기득권이라며 “호남의 국힘(국민의힘)”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즉각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해임을 요구하는 등 양당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김성희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늘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호남에서의 국민의힘’이라고 표현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너무나도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황 사무총장을 해임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지나친 말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당 차원에서 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보선과 관련해 “호남의 ‘국힘’에 줄 잘 서면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후 ‘호남의 국힘’을 ‘호남의 패권정당, 기득권 정당’으로 수정한 뒤 일부 표현이 과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당 지도부도 경쟁을 넘은 감정 싸움 양상을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은) 상하기 시작할 물”이라는 발언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대표가 지난달 26일 민주당을 겨냥해 “고인 물은 썩는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혁신당에서 먼저 네거티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9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에 조대표 등이 재보선 지원을 이유로 불참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는 당이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혁신당은 비교섭단체여서 국회가 언제 본회의를 열지 알기 어렵고, 이에 맞춰 언제 지방 일정을 잡을지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도 논평을 내고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해 “조국혁신당 때리기”에 재미가 들린 모양”이라며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더 한다면, 그 배경과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진숙 “최근 5년새 영양실조 환자 급증”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을·사진)은 24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만 3274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



년 6245명에서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만 6634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한 해의 수치를 넘어섰다. 전 의원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준호, 지역구 초등학생 요청 법안 첫 발의

‘각화-빛고을한글간판법’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사진)은 24일 지역구 초등학생들이 청원한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 각화초등학교와 빛고을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원의 이름으로 “한글간판을 늘려주세



요”, “한글로 된 예쁜 간판을 많이 보고싶어요”라는 청원이 담긴 자필 편지를 받았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육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25일 청원 법률안인 ‘각화-빛고을한글간판법’(육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청원자인 초등

학생과 직접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원자인 초등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정 의원은 “초등학생들이 청원을 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법안으로 발의하는 과정을 체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원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함께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법안 제출 행사’에는 각화초교, 빛고을초교 4학년을 대표해 9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